

예술적인 예술정책 공약이 아쉽다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예술정책 공약, 분석과 평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등 여타 분야에 비해 뚜렷한 변별력이 없는 영역으로 치부되어왔다. 또한 정책의 준비와 발표가 미흡한 만큼이나 이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네 단체의 문화예술 정책 연구자들이 모여,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네 후보가 보내온 문화예술 정책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심도 깊게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보들의 서면 인터뷰 답변 요지를 정리해 함께 읽는다.

대화를 나눈 사람들

강무성

사회, 본지 책임편집위원

나호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정책연구위원

염신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전호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장소

2007년 11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9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실



토론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정책 영역에서 이미 서로 많이 마주친 사이이다. 서로의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기반 위에서 출발한 덕분에 좌담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문화예술 정책 평가의 어려움

사회 <문화예술>이 이번엔 문화예술 정책을 특집으로 기획한 의도는 이렇습니다. 정치, 경제 쪽은 말만 화려할지라도 어쨌든 여러 약속이 난무하는데, 문화나 예술 관련한 정책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특이하게도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후보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얘기 자체가 나오기 힘든 와중에, 문화예술 정책은 더더욱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들어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9개 항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서면 인터뷰에서, 평가할 성질이 아닌 참여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평가와 개인의 문화예술 체험 등 2개 항을 제외한 답변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좌담의 성과를 미리 예측해보자면, 어떤 후보가 문화예술 관련하여 꿈을 많이 꾸고 있고, 또 가장 적절한 꿈을 꾸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책을 논평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현실에서 중시될 사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총평을 듣고, 답변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전문성, 구체성, 실현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원재 선생님께서는 2002년 대선 때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연대를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정책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데 실무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 이원재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좀 터주시죠.

이원재 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참여했지만,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등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공약을 제안하고 질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 공약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변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대부분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은 매우 첨예하죠, 교육도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은 무조건 그냥 다 해준다고 해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별 부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각 정당이나 개



전효관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다원예술위원회 위원장이며,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하자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 문화기획, 문화정책과 관련한 일들에 참여하고 있다.

인마다 문화적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는 답변이 대부분 유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 답변도 그렇습니다. 몇몇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화예술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별성이 없습니다. 평소 후보들의 경력, 소신, 활동과는 전혀 다른 정책들도 많고요. 정책 공약은 행간을 읽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참 중요한데, 저는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적 보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별성이 안 생기거든요. 문화예술 정책과 다른 분야, 교육이나

사회 정책, 더 포괄적으로는 국가 외교, 경제, 정치 영역과 연관되어 있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정책과 교육 정책이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등 실제로 더 큰 정책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완성, 통합성, 이런 맥락에서 행간을 읽으면 차별성이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신규 제가 보기엔 이분 공약이 저분 공약 같고, 저분 공약이 이분 공약 같이 느껴질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웃음) 이원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정책이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특정 정치 집단, 혹은 정치인의 전반적인 국가 운영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선거 기간 중에는 대개 싫은 소리 안 하잖습니까? 좋은 얘기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사실 후보들 답변에도 자신의 국가운영 전략과 상충되는 공약들이 눈에 보입니다. 후보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전략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심층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인상평인데요. 전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화를 ‘공공재적 가치로 보자’는, 그래서 시장논리를 떠나 당연한 국민적 권리, 공공의 것으로 보자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좀 올려보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긴 하지만, 충돌하는 두 관점이 한 후보의 공약 속에서 같이 등장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

“철학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의 설계를 못하는 정치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문화시설 건립 심사에도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프랑스를 문화사회로 여기게 하고요. 우리는 아직도 ‘경제 사회’ 수준의 리더 이상은 못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래서 후보들에게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회 두 분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대원칙과 문화예술 정책이 부분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게 실현성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효관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화가 생산력의 기반이 된다는 얘기가,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문화예술 복지 개념이 등장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읽은 느낌만 말하자면, 어떤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 상설팀이 있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해온 것 같고, 어떤 후보는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약을 도출한 것 같았습니다. 정책팀을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비전을 설정할 때 문화예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한 것이지만 경제정치적인 노선과 문화예술 노선 사이에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타 정책영역과의 일관성이나 통합성이 잘 연결되지 않은 정책은, 제가 보기엔 공약의 남발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호열 저는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낸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떤 분들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웃음) 질문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완곡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니까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답하고, 또 어떤 분은 두루뭉술하게 답했는데요. 기초예술 분야에 3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이번

질문들은 ‘예술’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저 역시 문화와 예술 개념의 포섭관계에 있어서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 없이, 적당히 경계를 지은 상태에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 간 보완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걸 찾아내기 어려운 답변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답변에 대해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권영길 후보가 내놓은 자료가 제일 공부 많이 한 자료인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숙제를 빨리 하느라 급하게 작성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 자극을 줘야 피드백도 받고 비판도 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네 분의 총평을 들어보았고요. 진행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질문지 만드는 사람과 답변을 평가할 사람이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방금 지적해주신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상호충돌 같은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질문들도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각 후보들의 철학과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보는 철학과 비전

전효관 사실 문화예술에 관한 철학과 비전을 묻는 질문에서 각 후보들에게서 읽어보고 싶었던 것은,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국가나 사회비전을 꿈꾸

“만약 문화관광부 해체하고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후보 있으면 그분 뽑겠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등 앞에 ‘문화’ 붙이면서 체육, 관광을 다 집어넣어왔습니다. ‘문화’ 하나로 집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의 철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는가였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문화적인 문제나 사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을 가능성이 큰데, 현재의 한계를 어떤 문화적 변환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설계를 못하는 정치라는 것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후보 모두 적극적인 비전은 잘 안 드러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권영길 후보는 ‘시간을 축소해서 여가시간을 넓히자’는 비전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철학과 비전에 대한 답변들이라기보다는 수사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회 대통령이 문화예술 실무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철학과 비전이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효관 네, 저는 사실 철학과 비전이 제일 궁금해요.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은 담당부서에서 대화를 통해 정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미

테랑 대통령은 문화시설 건립 심사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가 프랑스를 문화사회라고 여기게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 이번 후보들 중에는 그럴 듯하게 꿈을 꾸는 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효관 상대적으로는 있는데, 자기의식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경제 사회’ 수준의 리더 이상은 못 만들어내고, 국가 리더로서 비전을 문화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일단, 답변의 질로만 보면 권영길 후보와 나머지 세 후보 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크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부분, 두번째로 국가경쟁력을 예술과 연계시키는 부분, 세번째로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예술이라든지 문화예술의 일상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 훨씬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그동안 문화예술계로부터 학습된 효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리이러하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후보들에게 문화에 대한 철학, 비전까지 기대 안 합니다만, 권영길 후보는 문화 공공서비스, 다원적 사회 등 본인의 철학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세 후보는 철학이 거의 안 보였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예술은 중요한 것이라는 식의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시민이나 대중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또 최근에 올수록 점차 일상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문화를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인지 비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염신규 전체적으로 저는 후보들 공약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들만 해서. 문화예술이 중요하냐고 물으면 다들 중요하다고 하죠. ‘왜, 어떤 방향, 어떤 측면’에 대한 답에서 입장이 드러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답이 없고 가치중립적으로 구술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별로 보면,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진행됐던 문화예술 정책을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고, 권영길 후보는 비교적 진보



나호열 현재 예총 정책연구위원이자, 경희대 사회교육원 교수이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예술세계> 편집주권을 맡고 있다.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국현 후보는 늘 얘기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디테일이 없고요. 이명박 후보는 문화민주주의라든가 하는 좋은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개인의 색깔이 드러나기보다는 세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담론을 모아놓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색깔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후보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나호열 저는 만약에 문화관광부 해체하고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후보 있으면 그분을 뽑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등 앞에 ‘문화’ 붙이면서 체육, 관광을 다 집어넣어왔습니다. 물론 서로 포섭되지 않는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로 ‘문화’ 하나로 집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1 문화예술을 보는 철학과 비전

예술의 창의성이 사회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견해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경제적 가치 부상, 문화예술 중요성 증대 ■ 창의적 발상, 문화예술이 사회 발전 이끌어 ■ 문화예술 통해 계층, 세대, 지역, 남북한 통합 ■ 창작과 향수에서 적극적 문화복지 정책 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인정받는 시대 ■ 문화예술은 새로운 직업과 노동형태 창출해 경제적 의미도 ■ 개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대한 철저한 존중 ■ 글로벌 경쟁력 가진 문화산업으로 명실상부한 문화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축소, 여가 확대, 문화활동 사회적 지원 보장 필요 ■ 문화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사회적 공공서비스가 돼야 ■ 문화는 경제적 효용을 넘어 인간답게 사는 사회의 바탕 ■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적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은 인간에게 있어 마음의 숲, 정신의 산소 ■ 문화산업 콘텐츠의 원천, 생산적 여가활동을 사회에 제공 ■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창의와 아이디어 저장소 역할 ■ 창조와 창의성이 사회경제 핵심으로 기능하게 될 것

이 기사의 표에 나타난 답변 요지는 각 후보의 서면 인터뷰 답변서를 토대로 편집부가 작성한 것입니다(답변 전문 8~41쪽 수록). 후보의 배열 순서는 기호 배정 원칙에 따랐습니다.

갖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에 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죠. 앞서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 미테랑 대통령은 문화시설 심사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 평소 소신이 예술교육 현장의 정상화입니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굳이 저희가 지금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쟁 사회, 학벌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약(空約)을 내세워도 국민의 저항이 적을 것이고, 정책을 설사 안 낸다고 하더라도 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재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분야처럼 비전, 철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후보 모두 문화예술계를 소외 대상 정도로 규정하는 인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본래 시대적 비전을 제시하는 영역이잖아요. 최근 한국사회만 하더라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민주화를 이끌고, 훨씬 이전부터 사회적인 시대정신, 미래상을 제시해 왔었죠. 그런데 후보들은 문화예술인들을 하나의 이해대상자들로, 심지어 구원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문화예술 철학, 비전은 없고,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효관 저는 한국의 정책이 정말 뿌리가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에서 정책, 공약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약 3000번 정도 토론합

니다. 이처럼 하나의 공약을 개발하려면 수많은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에게 원하는 상(像), 필요한 것을 묻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걸 뭐 자문위원 한두 명 두고 똑딱딱만 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공약을 만드는 것이 조직화 과정이잖아요. 공약이라는 게 워낙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규정력이 적고, 실현의 압력도 적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조직화 과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대통령 되더라도 공약과 별개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에서 예술의 역할, 예술가 지원

사회 철학과 비전 쪽은 대체로 불분명하다는 정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에서 예술의 역할, 예술가 지원 문제인데요.

전효관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질문인데, 여기서는 후보별로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가정하는 것 아닌가. 어떤 면에서 정동영, 이명박 후보가 논리상으로 비슷하다면, 권영길 후보는 그 반대에서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연관 관계를 일부러 떼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문국현 후보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 표현이 약합니다.

이원재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열심히 숙제한 사람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웃음) 이 답변에서 권영길 후보가 확실히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냥 막연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인 공공성 영역과 문화예술인 영역을 식별하고 있는 건 정확한 차이입니다. 실현성 여부를 떠나서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예술계 고용 2만 개 창출, 국제교류 관련한 제안이 그 예입니다. 층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 정책하고 문화예술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밀접하긴 하지만 층위가 다릅니다. 다른 세 후보는 그것 자체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효관 이명박 후보는 산업예술과 기초예술의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이 잘 되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로 기초예술을 키우는 식의. 그런데 과연 영화산업이 발전하면 독립영화도 발전할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염신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오면서 조금씩 문화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기억하는 분은

기억하겠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이 <쥬라기 공원>의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문화산업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라면, 참여정부에서는 기초예술의 중요성, 문화예술 자체의 본연적인 중요성을 일부 강조하면서도 문화산업에 대해 손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볼 땐 참여정부의 이런 흔재가 정동영 후보에게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지 못하고, 뭐가 다른 논리로 전환시킬 논리적 틀을 못 갖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 후보의 경우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 더 가깝고요. 산업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을 보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문화의 본원적 가치에 대해 인정을 안 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길 후보는 예술인 정책에 대해 특히 많은 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식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고 싶고요. 문국현 후

2 문화산업에서 예술의 역할, 예술가 지원

문화산업에 있어 예술의 역할,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예술가와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에 대한 견해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은 문화산업의 기본적 토대 ■ 예술가의 사회적 인식과 지위 과거보다 매우 높아져 ■ 시장실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적 지원해야 ■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문화예술인의 참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은 문화산업 경쟁력 주는 잠재력 ■ 문화산업과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 ■ 산업예술의 부가치 수익이 기초예술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 예술가는 공공재의 가치, 경제논리에 종속될 수 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사회적 의미를 문화산업 성장 논리에서 찾아선 안돼 ■ 문화가치를 경제가치의 하위에 두면 부작용 ■ 예술가들은 사회에 다양한 질문과 자극을 던지는 전위 ■ 자기 직업을 통해 생계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은 문화산업의 기초적 콘텐츠이자 문화 자산 ■ 예술가는 경제적 희생 속에서 창작하는 경쟁 약자 ■ 예술가의 소득과 사회보장 증대 필요 ■ 공공의 성격이 있으므로 당연히 공적 지원해야

보는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는 코멘트하기 좀 힘드네요.

예술 창작과 향유의 문화 양극화

사회 다음은 예술 창작과 향유의 문화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가 언급한 문화바우처 제도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원재 네, 그렇게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정책적 비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전체적으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소외계층의 프로그램 지원 정도를 내놓는 것 자체가 인식의 한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삶 자체의 양극화를 의미하고, 그 중에서 문화예술은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소외계층 소외지역 프로그램 지원 정도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과소평가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신규 개인적으로 양극화라는 표현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양극화입니까, 일극화죠. 표현 자체에 굉장히 함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는 모순을 은폐시키는 표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쳐도, 시혜적인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저 역시 문화소외자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양극화의 해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양극화라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 개념의 문화주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정책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문화 없는 사람에게 문화를 주면 된다는 수준입니다. 이는 이미 참여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이고, 굉장히 정체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재 일단 제 기준에서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양극화를 반대하지 않는 후보로 평가됩니다. 양극

화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빡빡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정동영 후보의 전체 공약 중 현재 하고 있거나 당연한 말들을 빼면 유일하게 ‘지역밀착문화예술복합도서관 1천 곳 조성’ 이거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역으로 갈수록 미디어와 같이 복합성이 있거든요. 그 외에 실제 양극화에 대한 공약은 없는 것 같고요. 권영길 후보는 본질적으로 양극화를 부정하는 진보당인데, 답변이 생각보다 좀 약하고 특별한 공약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전효관 정동영 후보의 공약이 참여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여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성과 중 하나가 새로운 의제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문화, 지역문화 같은 의제를 만들어낸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정동영 후보가 참여정부랑 구별된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이 여기 나온 지역밀착문화예술복합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없습니다. 1천 곳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자체당 서너 곳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재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새로 건설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인력 정책도 부재합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도 없어서, 이것도 잘못하면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공약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네 후보 모두 예술창작과 유통의 양극화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술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호열 덧붙이자면, 저는 문화예술 정책이 자주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입장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향이 달라도 어쨌든 예술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인 구상은 계속 같은 기초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그 정권의 임기 내에서 되도록 바뀌지 않고, 문화부의 일을 책임져서 결과를 갖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는데, 왜 양극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가. 지역의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원을 조사해보니까,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영어도 듣고, 서예도 하고 그러지, 생활에 부대끼는 사람은 그런 시설에 오고 싶어도 정작 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요새 문화강좌 수강료를 3개월에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받거든요. 사실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니 마음대로 즐기죠. 그런데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먹고사는 데 바빠서, 일해야지 그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네 후보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양극화를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양극화 자체가 무엇인지 공히 생각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건 자기 나름의 문화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적당히 문화 개념 넣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3 예술 창작과 향유의 문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따른 문화 양극화에 대한 견해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 인프라에서 문화예술 활동 발표 기회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기업의 문화접대 손비 인정 확대 지역밀착 복합도서관 '문화예술지식사랑방' 1천 곳 조성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인 상호부조조직 법제화됐듯 '예술인공제회' 구성 단순 관람 아닌 참여와 체험의 문화 욕구 충족 지역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방안 고려 소외 계층을 위한 각별한 문화복지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질서에 내맡긴 문화정책들을 과감히 공적 영역으로 흡수 산업논리가 실현적 창작인들의 성장을 가로막아 의료복지, 사회복지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배려해야 문화예술 교육 전면 공교육화로 모두에게 창작과 향수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예술 향유의 공공 지원 고급문화의 일방적 공급 탈피, 계층별 프로그램 발굴 문화취약 계층에 예술강사 풀제 지원 확대



염신규 현재 민예총 정책기획팀장이다. 문화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독립영상집단인 다큐이야기의 연출부에서 작품의 기획과 연출을 맡은 바 있고, 문화정책 소식지 <일일문화정책동향>의 편집장을 지냈다.

합니다.

전효관 나호열 선생께서는 정동영 후보가 참여 정부 계승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실시한 주체로서 정책의 한계를 의식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책 분석이 없다는 것이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온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염신규 이걸 제 단평인데, 향유층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네 후보 모두 어느 정도 인식이 있으나, 창작 현장에서는 다들 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작 환경이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피상적인 느낌만 갖고 있고 구체적인 감은 없어서 그런지, 정

책 자체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 현재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소외계층에 공연 한 편 더 보여주는 식의 시혜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렇게 마련한 정책조차도 정작 빈민층은 먹고살기 바빠서 근처에 못 가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호열 현재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적어도 표준화된 하나의 시스템을 강제적으로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은 반드시 하게끔 하는 그런 논리가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예술인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도 시를 쓰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시 한 편에 얼마 받습니까’ 이거예요. 저는 빵을 사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큰소리 치면서 받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굽신거리면서 받고 싶진 않거든요. 매년 나오는 백서를 보면 기초예술인들 형편이 안 좋다, 이런 차원인데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한 손에 장악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원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지, 원래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신규 문화 관람 기회를 더 많이 준다, 혹은 우수한 공연을 소외계층에게 더 제시한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문화향수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무관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 다들 학교에서 단체관람해보셨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

“시혜적인 관점에서 양극화의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문화 소외자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양극화의 해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시된 정책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문화 없는 사람에게 문화를 주면 된다는 수준입니다.”

에서는 피곤하고 시간 뺏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양극화에 대한 정책이 그런 식의 공급형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다음 단계의 문화 예술 정책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계층별로 문화주체를 형성시키고, 문화주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고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면, 그걸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재 반복된 얘기지만, 한 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자주 드는 사례인데, 단적인 폐해가 국립극장에서 장애인들 초청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들이 그 높은 꼭대기에 어떻게 가서 봅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당위적인 정책들인데요. 많은 상상력과 정책사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현 정부만 해도, 창의한국에서 이미 최소기준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 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최소 공공문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계획도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또한 양극화를 해결하는 구조적 접근 정책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사회구조적 양극화가 아니라 문화예술계 안, 혹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양극화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정책안이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일관되게 정책들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창의한국에는 사회적 의미, 지역문화, 양극화에 대한 현 정부의 문제의식이 다 녹아져서 시작한 건데, 지금 정책적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깎고 못 한다 이러잖아요. 당위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성, 일관성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전효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인 정책을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각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유기적 연결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방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문화평가제 같은 제도가 제안된 적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형성하고 지표화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정책의 의제, 공약과 실행방안

사회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술정책의 의제와 공약, 구체적인 정책구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원재 이명박 후보의 경우 철저히 경제우월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철학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문화강국’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는데, 핵심은 일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지향주의, 성공 케이스, 비즈니스 마인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걸 참여정부의 정책과는 정면충돌하는 것이고, 이런 컨셉은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정부가 지향했던 경제중심의 과거 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효관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우선 권영길 후보 답변은 범주화되어서 어떤 상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은 부분적으로 강조점은 있는데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치 철학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준비 정도의 차이인 거죠. 특히 문국현 후보 공약은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실학, 동

4 예술정책의 의제, 공약과 실행 방안

문화예술정책의 의제와 공약, 과제와 구체적 정책구상은? 중심 키워드는?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p>[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소의 계층의 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 - '문화예술지식사랑방' 1천 곳 조성, 저소득 지역 문화소의 해소 - 운용요원 재교육, 지역 특성화 통해 지방문화시설 활성화 -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로 소외계층 문화향수권 보장 - 저소득층도 년 1회 이상 공연관람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도입 - 국공립 문화시설 야간 개장 확대, 야간 특화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 문화시설 보육시설 설치 확대 ■ 기초예술 창작기반 활성화 - 문화예술 교육 확대로 저변 확대 및 기초예술 창작기반 조성 - 국공립 문화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로 발표기회 확대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확대 	<p>[문화적 자존심이 있는 문화강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예술인 육성을 위한 문화창작 환경 조성 ■ 다양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문화 인프라 구축 ■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문화민주주의를 실현 -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 현장 예술가 우선지원, 차세대 적극 육성대책 마련 - 안정적 창작활동과 노후보장을 위한 복지제도 구축 - '생활예술' 및 문화예술 교육으로 문화예술 향수 확대 - 지역별 장르 특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육성 - 고른 문화향수를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 - 문화예술분야의 글로벌 인적 교류 및 국제화 추진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p>[문화는 공공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 - 문화시설과 시민을 매개하는 2만 개의 문화서비스 고용 확대 - 주민센터의 포괄적 문화 공공서비스 제공 - 년 5일 문화휴가제도, 공공문화시설 무료 입장, 공연장 입장료 상한제 ■ 모든 사람의 창작할 권리: 문화예술 교육은 시대정신 - 문화예술 교육의 전면 공교육화 -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중심: 문화의집 사명 복원 - 모든 고아원 아동들에게 고교까지 선택에 따른 예술교육 제공 - 교정시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 문화다양성 원칙으로 공존의 문화 구축 -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기본권에 초점 둔 문화기본법 제정 - 일방적 대중문화 한류확산에서 기초예술 분야로 확대한 문화 인적/프로그램 교류 - 스크린쿼터 146일 원상 복귀 - 복합상영관내 스크린 독과점 규제, 대안상영관 설치 - 다양성 문화의 활력소인 다원/독립 예술 지원 확대 - 이주외국인을 문화다양성의 건강한 새 주체로 - 음악 다원성 및 공공성 복원을 위해 음악진흥위원회 설치 - 이통사, 저작권 신탁기관의 이윤분배로 음악창작기금 조성 ■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과 복지 수준 획기적 개선 - 문화예산의 1% 매년 문화예술인 복지에 투입 - 문화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 프랑스 앙테르미탕 제도 한국 모델, 4대보험 제도 마련 - 전국에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실 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p>[사람 중심 진짜 문화, 디지털 문화강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일변도의 좁은 시야 극복 ■ 문화 양극화 해소를 진정한 '문화민주주의' 이룩 ■ 국가의 문화적 품격 제고 - 동아시아 문예부흥운동의 전면적 전개 -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작업 추진 - 실학과 동학의 정신을 되살린 인본주의 기풍 진작 - 창조한국을 선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밸리' 조성 - 생활체육 및 전통무예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프로젝트 - 전 국민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문화예술 교육 일상화 - 국가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문화원형과 문화자산을 저장 - 남북 문화예술 창조와 교류를 통한 통일문화 환경 조성 -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추진
<p>(권영길 후보 답변 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책 읽는 공동체 - 3,500개 읍면동에 생활지역 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 도서관 자료구입비 문화재정 2% 국고내 지원 -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구비 - 외국인 비율 높은 지역 도서관 해당지역어 도서 체계적 구비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정례화, 작가의 사회 참여와 독서 장려 	

학, 동아시아, 전통문화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준비 과정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염신규 질문 하나에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답변이 나와서 비교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강국'이란 표현을 정동영, 이명박 두 후보가 썼습니다. 문화강국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경제대국과 같은 비교논리, 우월의 논리 속에서 문화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일부 드러나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문화민주주의 실현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보완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순될 수 있는 정책들도 보이고요. 정동영 후보는 특별한 어떤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참여정부에서 실행하던 정책을 강화, 활성화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문국현 후보 답변을 보면 실학, 동학 등 과거의 한국적 가치와 디지털이라는 비교적 최신의 것을 결합해놓은 것 같은데, 뚜렷하지 않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정책의 일관성이 보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문화정책이 이렇게 다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카테고리는 예술진흥, 문화환경, 문화 교류, 미디어 정책,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을 통한 최종적인 문화예술 비전이 무엇이나는 것이죠. 본인이 대통령 돼서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 어떤 수준의 국가로 갈 것이냐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모호하다는 느낌입니다.

나호열 그런데 정동영 후보가 말하는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하는 제도는 이미 시행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이원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분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전효관 아, 이걸 그렇지 않아요. 그 제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원재 그렇네요. 그런데 이건 아니더라도 사실 관계 오류가 곳곳에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의 전문성과 구체성에서 권영길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문국현 후보의 경우 여기서 추상성이 확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권영길 후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히 공공성의 관점에서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명박 후보는 각론으로 가니까 본인의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한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 사실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쟁 중심, 입시 중심의 교육정책을 내세우는데요. 예를 들면, 특목고, 영어전문학교, 국제도시학교 등 이런 정책들과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식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배려라든지 이런 정책은 이명박 후보의 코드와 어울리는 정책들이 아닌 것이죠. 서울시장 할 때도 "모든 것은 10원이라도 내야 쓸 수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는 좋은 거다." 이렇게 말했었던 거예요.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문화민주주의와 시장 중심 정책은 굉장히 많이 충돌합

“문화예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지 않거든요. 이런 핵심적 구조를 언급하지 않고, 문화예술 정책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문화를 탈정치화하는 것, 이것이 문화예술 정책 공약들을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니다. 정동영 후보는 아쉬운 것이,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있는데 문화정책의 성과를 잘 식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창의한국 등의 초기 문화예술 정책과 후기 정책의 충돌이 전 굉장히 큰 딜레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든지, 그런 정책들의 장점을 어떻게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 분석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체화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염신규 결국 정책이란 것이 선택의 문제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식의 정책이 많아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하나 하면 다른 걸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것들을 다 하겠다는 것인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대개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현성을 문제로 삼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재 민노당 정책은 전제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노당은 국방비의 전폭적인 삭감이나 부유세 창설과 같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역대 정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실제 집권을 할 수 있는가?’와 ‘정책의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크게 추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나름대로 오히려 구체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창작센터 100

개, 문화의집 600개 짓겠다 이런 건립 위주의 사업을 얘기하는데, 그런 건 민노당 정책과 충돌한다고 까지 말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신규 제 생각에 권영길 후보 정책이 다른 후보보다는 구체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웃음) 다른 후보들의 정책은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 아닐까요. 단, 진보 정당이어서 그렇겠지만 권영길 후보는 현재 한국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사회의 틀을 전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길 후보가 집권한다고 해서 바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 좀 걸리긴 하거든요. 보통의 사회가 갖고 있는 보수적 속성을 감안하고 본다면 좀 힘든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연 5일의 문화휴가 실시’를 정책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업들한테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시스템이 존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원재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정책의 실현성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거든요. 예산, 자원조달 같은. 그런데 권영길 후보 정책의 경우는, 그런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집권가능성, 민노당의 시스템에 사회가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걸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실현가능성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전효관 권영길 후보가 제시하는 문화예술인 사회

복지 제도 같은 공약은 외국에서도 실시하는 나라가 드물거든요. 그런 건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존경하는 문화적 풍토가 있어야 가능한 정책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합의를 본다는 건 한국사회가 뭐랄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진전됐을 때나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죠.

지역문화정책

전효관 그런데 후보들 답변에 서남해안에 관광벨트를 짓는다는 식의 대규모 지역문화 공약 같은 건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원재 그건 핵심공약이라서 차마 문화예술 공약에 해당한다고는 생각 못 한 게 아닐까요. (웃음)

전효관 균형발전을 한다, 기관을 확충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여서 여기서는 크게 논점은 없는데요. 후보들 개인의 지역 개발 공약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저는 지역 내 문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규모 국토개발을 할 경우에 지역문화의 근거 자체가 흔들려요. 지역에 한국적 정서구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패턴과 관련되어, 예를 들면 골목길이나 시장 같은 곳에서 소비되는 문화적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생기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런 정서는 유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지역적 정서기반의 근거들을 다 말살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이 지역문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민들은 또 개발공약에 목을 매는 상태이고. 여기 나온 얘기들은 이런 문제



이원재 현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사회미학에 관심이 많은 문화운동가이다.

를 고려하지 않은 얘기여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호열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세분과 달리 문국현 후보가 지역문화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 눈에 띄네요. 어떤 연유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 안을 만든 건지... 흥미롭게 봤습니다.

지금 전효관 교수님이 말씀했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이 지금 난개발 식으로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관계되는 청사진이 거의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답변들이 굉장히 짧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이분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원재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역

분권, 지역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 영역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 대규모 개발은 문화정책과 연관성을 갖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주목해야 할 카테고리인데, 현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구체성 있는 것으로는 딱 하나 '지역문화세계화재단'이 언급되는데, 어떤 애긴지 안 나와서 전문성이나 관심,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후보는 좋은 말

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본인의 기존 정치철학과는 충돌하는 거죠. 이명박 후보는 특히 메가 이벤트, 개발주의 중심의 지역 정책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경부대운하가 있고요. 이명박 후보가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는 정책을 써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여기 언급되는 '생활밀착형' 이런 건 실제 자신이 주장하는 다른 공약과는 많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개발 반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민노당의 철학에 걸맞는 다른 방식의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문국현

후보는 지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근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쑥 들어온 정책처럼 느껴져요. 문국현 후보는 '진짜 경제'를 강조하는데, 자신의 경제철학에 맞는 지역문화 정책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통일문화 환경조성

염신규 통일문화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들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미 관계 급진전이나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별말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과 전망이 있고 그걸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의 통일문화 환경조성은 명백하게 소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 정동영 후보도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언어학자나 역사학자들의 교류의 경우, 이미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권영길 후보 경우와 문국현 후보 경우가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는 비교적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드러나지 않아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들이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 이질감 극복,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최근 트렌드는 동질성 회복보다 오히려 서로 다른 부분

을 이해하자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고요. 목표 지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느껴집니다.

전효관 사실 남북 문화예술 교류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벤트였잖아요. 저는 남북교류에서 생활 교류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요. 제가 보기엔 권영길 후보도 그런 면에서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이원재 결국 교류하겠다는 얘기만 나온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미디어 같은 건 언급 안 하고 있잖아요. 정동영 후보의 경우 국가보안법 얘기하지 않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통일부 장관일 때도 폐지 안 했거든요. 이런 핵심적 구조를 언급하지 않고 문화예술 정책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 즉 문화를 탈정치화시키는 것,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정동영 후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민노당도 통일정책을 평소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문화예술 정책과 통일정책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문화예산의 적정성, 재원조달 방안

사회 다음 이야기는 예산입니다.

염신규 지금 이명박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들 1.5%, 2%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물론 문화예술계의 입장에서는 문화에

5 지역문화정책과 통일문화 환경조성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문화예술을 통한 통일문화 환경 조성 등의 정책과제는?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p>[지역문화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부 재정 투여 ■ '지역문화세계화재단' 설립 및 관련 특별법 제정 	<p>[지역문화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있는 600개 지역 축제만 정상화해도 지역 문화 진흥 ■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 ■ 각지의 문예회관을 '창작 발전소'로, '문화체험장'으로 	<p>[지역문화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이양해 폐기 위기에 놓인 문화의집 국비 지원 복원 ■ 문화관광 빙자 개발사업 억제 ■ '문화재정치표' 통한 충실도를 기준으로 지방에 예산 배분 ■ 공동창작센터 100, 문화의집 600, 작은도서관 3,500개소 	<p>[지역문화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위원회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각지역 예술 자원 활용 극대화,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유도 ■ 지역 축제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원 방안의 조례 제정 의무화
<p>[통일문화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언어학자, 역사학자 등 교류를 통해 이질감 극복이 중요 	<p>[통일문화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 	<p>[통일문화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원주의 원칙 중심 문화교류 ■ 남북사회문화협력회의 상설, 문화협정 채택 ■ 해외 문화재 환수작업 공동 전개 ■ DMZ 문화재 현황 공동 발굴 조사 ■ 남북 공동의 문화유산의 날 제정, 탐방과 교류 민간 채널 확대 	<p>[통일문화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를 위한 상설 거점 마련, 공동연구사업 등 인적 교류 확대

산이 늘어날수록 좋아진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예산이 그런 식으로 마구 결정되어선 안 된다고 보고요.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원재 후보들이 들으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사실 선거 때마다 문화예술계가 요구한 것이고, 이것도 일종의 교육효과겠죠. (웃음)

나호열 좀 더 확실하게 질문했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몇 %가 되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도 막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기업메세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이미 메세나 1기업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올 2월인가 용산 중앙박물관에서 메세나 협회 회의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스스로 문화재단 만드는 것이 세제 혜택도 훨씬 많이 받는다고요. 이건 재탕 삼탕하는 얘기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정동영 후보 답변이 제일 양심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타당한,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전효관 관점을 약간 전환하면, 1%냐 2%냐 하는

문화예산 얘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화관광부 예산을 말하는 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예산의 0.2% 정도예요.

사회 그럼 나머지 5분의 4는 어디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전효관 순수 문화 예산이 1%면 이걸 OECD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1%는 굉장한 허수예요. 그 1% 안에는 관광예산도 들어가 있고, 스포츠, 미디어, 문화산업도 있어요. 정말 어디까지 문화예술 범주로 잡을 건지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원재 예를 들어서 문화부 예산으로 잡힌 것 중에는 개발사업부터 문화유산, 체육 등 다 있는 것이니까. 실제 퍼센티지의 적절성이 의심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예산의 구성 요소 자체가 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힘들고요. 아마 후보들도 대부분 문화예술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예산에 대한 재정비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기획사업 중 다른 부처 예산

의 중복투자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문화부보다 다른 부처에서 쓰는 문화예산이 더 많을 거예요.

사회 다른 부처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문화 영역에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재 네. 문제는 그런 것들이 국정운영 안에서 목적 있게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복투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거의 모든 부처가 다 하거든요. 실제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 정책도 여러 부처에서 하지만, 중복 투자에 전시 행정만 난립할 뿐 실제로 소수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 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것들은 예산을 앞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국정운영 책임자라면 이미 집행되는 예산의 상호보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네요.

전효관 사실 후보들에게 단순히 요구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문화단체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잡아서 어떤 부분에 이만큼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적정선을 요구해나가면서 근거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염신규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 상당한 분들이 오랫동안 문화 재정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문화부만의 예산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쓰이는 문화 재정 부

분에 대해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배치하는 위원회라든가 하는 방식으로요.

이원재 기본적으로는 예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부처 간 자율성. 특히 문화 쪽은 예산을 산출하고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부처와 거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통합적 가능성을 가지려면 예산 평가나 취합이나 지표개발 등등 예산 관련 위원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 마음대로 국가 예산을 휘두르는 현재의 비상식적인 행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처럼 특히 중복성이 강한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화가 정통부와도 물려 있고, 방송위원회와도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성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들이 그런 것은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염신규 거친 얘기일 수 있는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과 문화 정책 사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행정부처들은 몇 백억짜리 사업을 좋아하지 몇 억짜리는 안 좋아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영역에서는 대규모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는 이상 몇 백억짜리 사업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국은 재정에 대한 접근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원재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심각한 것이, 문화예산은 대부분 사이즈가 작는데 한방에 무슨 몇 조 단위의 관광단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6 문화예산의 적정선, 자원 조달 방안

문화예산을 국가예산의 몇 %로 설정할 것인지, 별도의 자원 규모와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책 구상이 있다면?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산 2012년까지 전체예산의 1.5% 수준까지 확대 ■ (자원 조달 방안) 무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예산 230조원 중 낭비적 요소 절약, 문화예술에 집중 ■ 기업 메세나를 바탕으로 1기업, 1문화예술인이나 단체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산 국가예산의 2% 선 ■ 문화산업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산 국가예산의 2% 선 ■ 건설비리와 연루된 재정 절감, 문화예술에 우선적 투자



6 문화예산의 적정선, 재원 조달 방안

- 문화예산 2012년까지 전체예산의 1.5% 수준까지 확대 (재원 조달) 무응답
- 전체예산 230조원 중 낭비적 요소 절감, 문화예술에 집중 기업 예산을 바탕으로 1 기업, 1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연결
- 문화예산 국가예산의 2% 선 문화산업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징세
- 문화예산 국가예산의 2% 선 건설비와 연부된 재정 절감, 문화예술에 우선적 투자

그건 사실 문화로 포장된 개발사업이고, 문화적 맥락과 연관성을 갖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정치논리로 움직이는 예산들입니다. 당연히 비리나 부적절한 사업이 되어서 실패하게 되고요. 정치공학과 문화정책의 괴리, 예산 낭비에 관련하여 대선 주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효관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만 해도 3억원이 안 넘는 축제는 없어요. 그런데 인력 양성, 문화예술인 투자와 같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끼는 예산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예진흥기금 확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사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현재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산은 국고(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예진흥기금이 점점 줄어들어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에 복권기금, 방송기금 등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하자는 등의 여러 제안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원재 굉장히 구체적인 쟁점인 것 같은데요. 저는 문국현 후보 답변을 제일 재밌게 봤어요. 복권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잖아요.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권영길 후보가 내놔야 할 정책 아닌가. 권영길 후보의 정책은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매우 높죠. 특히 높이 평가하는 것은 목적액까지 국고를 확충하고, 이후의 생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예요. 하지만 민노당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아요.

방송기금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몇 년 전 방송기금 정책 토론에 발제자로 참석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방송기금이 언급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이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미디어나 방송이 기초예술과 연관된다는 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실제 이유는 방송기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 자체예요. 돈이 남았으니까 무조건 다른 기금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은 국가정책에서 보면 실패한 정책이죠. 복권기금과 방송기금 등에서 다른

기금으로의 재전환은 정책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후보들이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복권기금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국현 후보 경우 문제제기는 적절한데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쉬웠습니다.

나호열 권영길 후보 정책도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국현 후보가 얘기했듯이 만일 제가 지원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 로또점도 많고 사설경마장도 많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마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300만원, 400만원 버리고 가고요. 고급예술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 돈을 빨아 먹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런 기금 말고 국가가 의지를 갖고 계류 중인 법안을 철회해야 하고, 이걸 국가의 의지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국가가 의지를 갖고 육성하려고 한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 이겠죠.

사회 지금 복권기금은 남아도나요?

전효관 그렇지 않죠. 그동안 복권기금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6% 정도가 적립됐는데, 그게 500억 원 정도예요. 게다가 로또를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문화예술 관련된 기금이나 재정 문제는 국가 의무나 책무 영역으로 인식해야지, 이제 민간위원회 됐고 운영을 민간에서 하니까 재원조성도 민간에서 하라고 하는 건, 세상에 그런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회 복권기금이 쓰여야 한다면 좀더 나은 데 쓰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총 만드는 것보다는 나올 것 같은데요.

전효관 복권기금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고 대체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간에 복권기금으로 얼마씩 들어오니까 논의 자체가 중단돼버린 데에 있다고 생각해요. 로또 기금을 문화예술에 쓰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쓰고 있거든요.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기금에 의존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장기적인 지원정책 플래닝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7 문예진흥기금 확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 구상과 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기능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견해는?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확충) 무응답 출범한 지 2년여에 불과,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지원 지속 추진 또는 복권기금 등에서 지원 개선 검토 (예술위의 위상) 무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권수의 15%로 일시 상향조정, 조성목표(1조5천억)에 도달하게 장르중심 사고에 매몰되지 않도록 실무 전문가 위원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권기금은 사행심 산물, 문예진흥기금에 부적합 문화부 및 지역문화재단과 불필요한 경쟁, 중복 업무 지양

염신규 복권기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예진흥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행정의 입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논리인데, 일반 행정의 논리를 문화예술 분야에 들이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걸리고요. 앞서서 많은 후보들이 문화강국을 얘기하고, 예술창조력 강화를 얘기했는데 그런 비전과 기금 폐지는 상호충돌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네 후보 모두 문예진흥기금 폐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적극적인 대안을 얘기 안하는 건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논의는 전문가 집단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입장 표명하는 후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원재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책이 결국 예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현실인데, 예술정책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재원확충의 현실성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많이 비판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위원회로의 전환과 기금 폐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이 됐기 때문에 기금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들이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식 이하라는 거죠.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면, 그 정책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책 영역에서 핵심인 건데요. 그리고 복권기금 문제는 로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금 문화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지나치

게 로또기금에 의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국가예산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 생긴 것이죠. 이걸 직 무유기거든요. 예술 지원방식에 대한 문화부의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부가 민간위원회로 만들고 “너네 민간위원회 됐으니까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건 문화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따져봐야 할 만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돈 얼마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를 떠나서. 그런 관점이 후보들에게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정동영 후보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시킨 책임주체의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무응답할 수 있나요. 사실 민간위원회라는 용어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정부 공공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국가예산 및 공공재원을 써서 공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 시스템 자체도 상당 부분 국가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사회 권영길 후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장르 중심 사고에 매몰되지 않도록 실무전문가로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일리가 있나요?

전효관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장르로 나뉜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라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해관계를 재설계하고, 목적별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못 풀었다는 데 사실은 문제

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6명의 장르위원과 5명의 일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의제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장르위원과 일반위원이라는 구도를 다차원적으로 다면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신문에서 행정전문가, 법전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행정전문가이 되 문화예술에 식견이 높은 사람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가나 경영학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을 상당히 비하하는 이야기죠.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고 타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문국현 후보가 얘기하는 문화부와외의 정책조율 문제가 핵심문제라고 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쪽으로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지는 현 정부 초기 기초가 후반기에 오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역할이 재조정돼야 합니다. 예술정책의 전문성, 방향성을 일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문화부가 협의를 찾아야 하고요. 최근에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에서도 교통정리 하지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신규 대통령 후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지원기구에 대한 입장과 방향은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집단이 직접적으로 개편방안을 얘기하기보다는요. 여

하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 이후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현장으로서도 큰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르 중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부분과 미래의 한국 예술계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동시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는 기구라는 점만 표명된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정책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재 장르 중심 문제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이 언급됐는데요. 저 역시 이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문제로 토론했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질문에 대해 원래 후보들이 가져야 할 식견이라는 것은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부 기준으로는 지원 정책 기관인 것이고, 예술정책에 대한 책임은 문화부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정부가 산하기관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일을 계속 넘기는 식의 관계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부가 예술정책의 기획조정력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자율성을 준다는 명목 하에 상당 부분 책임을 방기하여 정책적 공백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책임자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 예술 정책 안에서도 상호보완성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전효관 문화부 정책이 아닌 대통령 공약에 있어

서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체화시키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명이 핵심이라고 봐요.

나호열 저도 문학 활동을 하지만, 문학, 미술, 무용, 음악은 워낙 크니까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있어요. 그런 장르 중심의 문제라면 해체돼야 한다, 그건 좀 바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더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아예 문화위원회와 예술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문화와 예술의 관계가 밀접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 활동을 보면 이견 뭐 상호견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간다고 과연 제대로 안착될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말 국민들에게 관심 받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으니까 청원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말하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만의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칠게 이야기해서 민주적인 절차, 시스템 공개 등을 해서 좀더 까발리고 매맞아가면서 몸집을 키워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상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지금 후보들의 답변을 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정보나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문화예술 정책 영역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

사회 오늘 긴 시간 동안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여러 가지 문화현실을 살펴봤고, 자기반성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웃음) 마지막 총평들을 좀 나눠주시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미진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전호관 보통은 시민단체나 예술단체가 하는 작업을, 이번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매우 정치적으로 대우받고 있다. 이 때 정치적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 맥락은, 어떤 쟁점 형성에 이를 만큼 의제화, 공론화되지 못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위무' 차원, 혹은 '공약존재'를 보여주는 차원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견 사실은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쟁점이 되잖아요. 현재 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의 역할을 재인식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나 예술계 내부에서 좀 미진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나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정책과 공약을 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질문을 던지면 정치가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신규 좀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는 결국은 철학적인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대 문화정책을 쭉 훑어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늘 아쉬운 부분이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철

학이 굉장히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근대국가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실험했던 정책들이 막 들어와서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 실험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최소한 현재 한국사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자신의 철학이 결합된, 일종의 토착화된 문화정책과 자신으로부터 발현되는 문화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나호열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부의 문화정책이 더 낮고 못했다고 따지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정책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예컨대, 학생들 총학생회 선거를 보면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1년 동안 이거 하나만 하겠다고 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공약을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신타래가 하나가 풀리면 전체가 풀리는 것처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약속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원재 일단 국가정책과 문화정책이 만나는 연관성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정책에 있어서도 요즘 디자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한국의 정치 영역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문화정책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좀더 많이 인지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문화예술계만

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인식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선거 때 후보자들이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토론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 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성정책, 교육정책 토론에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투표권자들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은 워낙 자유로운 영혼들이어서 조직이 안 되거든요. (웃음) 정치하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선진국이 되자 라고 말하는 다른 국가들에서 어떤 문화예술 정책들을 사용하는지 되새길 수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앞으로 후보들이 좋은 공약도 내고 문화예술에 관한 철학과 비전도 잘 가질 수 있다, 결국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저로서는 이 말이 많이 와 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 이해정 편집부 | 사진 박정훈